

“지방의정연수센터 확대·승격을”

김정수 도의원, “지방의회 의원·사무직원 교육·연수 의무화, 참여방안 마련을”... 대정부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운영위원장)은 15일 전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서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의정연수센터 확대 및 승격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원 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관련 수요와 각종 요구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도 현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 3개 팀 8명(정원 7명, 파견 1명)에 불과하다”며 “지방의정연수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예산을

확대·승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 체계의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법 등에 의무화하고, 의원의 교육 이수 실적을 공개하는 등 의원 및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지침 등

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정연수원이 시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교육·연수 교과 편성 및 시행은 지방의정연수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원리에 불일치한 것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일원화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 구성원의 역량개발 및 시민 대상의 의회민주주의 연수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시도·시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웰다잉 문화조성 위한 정책 마련을”

황영석 도의원



화조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은 15일 제4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 21.3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매년 1%포인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23%를 넘어선 상황이다. 또한 1인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1인 가구 수는 27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에 이어지고 있어,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의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영석 의원은 “지난 2016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시·군의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죽을 준비 교육 및 상담, 유언장 작성, 유품 정리 및 임종 준비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웰다잉 문

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전북도가 유일할 실정이라며 “조속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 의원은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전 세대에 대한 웰다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웰다잉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서양 등 외국에서는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학교에서부터 웰다잉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우리 일생 중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품위 있는 생애 말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공포하라”... 도내 예비간호사들도 성명 잇따라

정부와 여당 건의로 16일 국무회의에서 유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 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북의 예비간호사들이 잇따라 당정 규탄성명을 냈다.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회와 교직원, 학부 및 대학원 학생회 관계자들이 15일 전북대 간호대학 니이팅게일 홀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회와 대학원 등 300여명은 15일 전북대 간호대학 니이팅게일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면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국가권력의 중심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한 법”이라며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은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불모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와 과는 달리 코로나19 종식을 선연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불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결기를 통해 그

“간호법, 총선·대선서 여야 합의로 출발한 법”
전북대·예수대·익산 원보전 등 정부·여당 규탄성명
오늘 유석대·원광대·한일장신대·군장대 등도 예정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익산 원광보건대학교 학생 및 교수들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우리는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라며 “(대통령은) 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을

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에는 전주예수대학교 간호학부 학생 및 교수 100여명도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지역 단체들의 거짓된 선동과 정치공학적 잣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

는 역행적인 처사가 거론되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공무원의 중립성에 크게 위배되는 위대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전북의 예비간호사들의 잇따른 비관성명은 16일 국무회의 전까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에는 유석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한일장신대, 군장대 등 간호학과 소속 학생 및 교직원 교수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성명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뉴스

“문화재 전담인력 확충 시급”

이병도 도의원



후백제 역사 재조명까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은 15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 전담인력의 확충을 주장했다.

현재 도내 문화재 정책을 전담하는 학예인력은 총 30명(도본청 6명 제외)이다. 이마저도 80%에 달하는 24명이 하위직 임기제로 충당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도내 지정문화재는 총 1,017건(국가 325, 도 692)으로 매년 지정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문화재의 법적 범주가 생활문화재로까지 확대됐고 관계 법령도 무형문화재 및 별도의 개별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의 문화재 행정 수요도 최근 급증 추세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전라북도에서도 역점 추진했던 가야문화사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및 전북학 연구에 대해서 최근에는

않은 분야”라고 하면서, “문화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정책의 기본과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절경은 문화재 전담 학예인력의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김관영 지사가 전통문화산업화를 비중있게 강조하고 있는데, 문화재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재 전담인력 확충 없이 전통문화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라도 천년사 폐기해야”

오은미 도의원, “마한·백제·가야사 서술 내용에 ‘일본서기’ 지명 사용 1권 총설 몇장 검토 결과 200개 넘는 맞춤법 오류... 이미 동네북·누더기”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민사관·역사왜곡 논란, 맞춤법 오류투성이인 전라도 천년사를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 의원은 “마한·백제, 가야사 서술 내용에 대해 ‘일본서기’의 지명을 사용했고, 특히 가야사 부분은 봉수나 제철 유적, 정체성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진행 중으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는 등 많은 논란과 문제 제기로 의견서 접수 기간을 7월 9일까지 2개월 연장한 상태다.”

오 의원은 “광개토태왕 비문 조각부

터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수회를 통한 역사왜곡을 자행하면서 정헌론의 근거로 활용하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재무장을 서두르고 평화헌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도 천년사가 그들의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에서든 고대 일본(야마토 왜)가 고대 한반도의 일부를 지배했다는 인내본부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고, 전라도 천년사 발간의 최후의 승자가 일본이 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사 왜곡과 논란은 말할 것도 없이 지속적으로 토론·검증이 되어야 하지만 완성된 책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맞춤법 오류투성이”라며 “1권 총설 몇 장을 검토한 결과 잘못된 틀린 글자, 띄어쓰기 등 200개가 넘게 발견돼 허접하게 짚이 없어 낮이 뜨거울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라도 천년사는 개인 서적이 아니고 막대한 혈세를 들인 관공서적인 만큼 집필진들은 개인 자격이 아닌 전라도 전체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의 자부심이자 긍지여야 하고 전라도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야 하는 만큼 식민사관·역사왜곡 논란에 맞출법 오류투성이까지 이미 동네북, 누더기가 된 전라도 천년사는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다”고 설명했다.

“역사 왜곡과 논란은 말할 것도 없이 지속적으로 토론·검증이 되어야 하지만 완성된 책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맞춤법 오류투성이”라며 “1권 총설 몇 장을 검토한 결과 잘못된 틀린 글자, 띄어쓰기 등 200개가 넘게 발견돼 허접하게 짚이 없어 낮이 뜨거울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라도 천년사는 개인 서적이 아니고 막대한 혈세를 들인 관공서적인 만큼 집필진들은 개인 자격이 아닌 전라도 전체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의 자부심이자 긍지여야 하고 전라도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야 하는 만큼 식민사관·역사왜곡 논란에 맞출법 오류투성이까지 이미 동네북, 누더기가 된 전라도 천년사는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체계 구축 빈틈없이”

김성수 도의원



경우 정액·배분되나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배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15일 제40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에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에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되었으나 관련 계획수립·추진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행정편의적 행태,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무관심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과지향적이며, 인구감소 실태 및 원인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에 기반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평가기준 및 성과분석의 지표와 항목에는 인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와 항목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타재원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과 훈령·예규 등의 법령 등 관리에 관한 규정 등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지침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성수 의원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패도지(一敗塗地)가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 필요하다”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분석자료를 주요 시책에 내실있게 반영하여 객관성, 투명성, 사업성 제고, 전문 또는 일반인기 계 확보 등으로 전문성과 핵심역량 증대, 인구감소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상향식 체계 이행 등부권 중심의 균형발전 달피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응 확대·재원, 원활한 사업연계 및 구성·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이 공감·체감하고, 보다 행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철회하라”

김정기 도의원



김 의원은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

한하라는 행안부의 2023년 지침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운영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데도 행안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

를 넘어서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정기 의원은 행안부 지침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과 훈령·예규 등의 법령 등 관리에 관한 규정 등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지침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